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 ~ '25)

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2024. 3. 29.

관계부처 합동

목 차

I.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1
II. 2023년 평가 및 2024년 정책방향	3
1. 2023년 청년정책 추진 평가	3
2. 2024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5
III. 2024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6
1. 시행계획 개요	7
2. 분야별 주요 내용	8
3. 향후 계획	31
[참고] 주요 사업 추진 일정표	32

I.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1

수립 배경

- ☐ 청년의 행복한 삶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년)」 수립(’20.12)
 - *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20개 중점과제 마련
 - 윤석열 정부는 희망·공정·참여 기조 하 역대 정부 최초로 청년 국정과제 수립하고 이를 반영해 기본계획 수정·보완(’23.3)
-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매년 시행계획 수립 추진

2

법적 근거

- ☐ 「청년기본법」 제8조 및 제9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청년기본법」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국무총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수립 주체

- 「청년기본법(제9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주체는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 중앙행정기관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관련 35개 기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부,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통계청, 재외동포청

- 지방자치단체 : 17개 시·도지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4

수립 경과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년)」 수립(청년정책조정위원회, ’20.12.23)
-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청년정책조정위원회, ’21.3.30)
-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청년정책조정위원회, ’22.2.14)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년)」 수정·보완(청년정책조정위원회, ’23.3.29)
-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청년정책조정위원회, ’23.3.29)
- 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
 -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안) 마련 및 제출(’24.1.31)
 -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지침 통보(’23.11) 및 관계부처 설명(’23.12)
- 시행계획(안)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24.3.29)

Ⅱ. 2023년 평가 및 2024년 정책방향

1 2023년 청년정책 추진 평가

- ◇ ‘청년’을 정부 핵심 아젠다로 설정하고 희망·공정·참여 기조 하 청년들의 현실 문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책 마련
- ◇ 정부위원회 청년참여 의무화, 온·오프라인 통합지원체계 구축 근거 등을 담은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정책추진 법적 기반 강화

1. 차질 없는 청년정책 추진

- 정부 최초 청년 국정과제 수립에 따른 종합적·분야별 청년정책 추진
 - 청년정책 여건변화 및 현정부 청년정책 기조를 반영하여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23.3)하고, 분야별 정책 추진방향 제시

일자리	단기 실업대책 중심 → 진로탐색, 일경험 지원 ▲청년 일경험 활성화 방안(‘23.1)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추진계획(‘23.1)
주거	공공임대 중심 → 내 집 마련까지 주거정책을 확대 ▲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방안(‘23.1)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23.8)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23.11)
교육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인재양성 체계 전환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 방안(‘22.8) ▲2024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23.1)
복지·자산형성	자산형성 프로그램 확대 + 취약청년 발굴·지원 강화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22.11)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추진계획(‘23.3) ▲청년도약계좌 출시(‘23.6) ▲고립·은둔청년 지원방안(‘23.12)
참여·권리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참여 제도화 ▲청년보좌역·2030자문단 구성(‘22.9) 및 24개 부처로 확대(‘23.8) ▲정부위원회 청년참여 확대방안(‘23.12)

- 「청년기본법」 개정을 통해 청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 청년 참여 및 소통 활성화

- (청년참여) 청년의 국정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청년세대의 인식·요구를 국정 전반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 마련
 - 24개 전 장관급 기관까지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설치를 확대해 청년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원칙적으로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총 211개 위원회를 청년참여 위원회로 지정
 - 정책 과정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과 정책담당자를 이어주는 청년DB 구축을 완료하고 DB활성화 방안 모색
- (소통·홍보)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통의 장 마련 및 다양한 경로를 통한 청년정책 홍보 확대
- 청년정책 공작소(4회)를 통해 청년이 직접 발굴한 제안사항을 정책화하고,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행사 실시
 - 온라인 SNS 채널 기반 청년 눈높이에 맞는 영상, 이미지(카드뉴스) 콘텐츠를 제작하고 청년정책 서포터즈 운영
 - 청년정책 점검회의('23.7, 대통령 주재) 계기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보좌역·자문단, 청년인턴과 함께 청년정책 추진현황 점검 및 홍보

3. 정책 전달 및 환류체계 강화

- (정책 접근성) 청년들의 청년정책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온·오프라인 통합지원체계 구축
- 부처별·지역별로 산재된 청년정책 정보를 실시간·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 마련
 - 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총괄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지역 맞춤형 청년사업 기획·운영 지원
- (정책평가·연계) 청년정책 시행계획 연차 평가를 실시하고 중앙-17개 시·도 간 청년정책 협력체계 구축
- '22년 시행계획 전 과제에 대해 청년의 관점에서 정책효과,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정책 환류 추진
 - 17개 시·도-중앙 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간담회 및 지역-중앙 청년 네트워크 교류회 개최로 중앙-지역간 연계·협력 기반 구축

□ 역대정부 최고 청년고용률 및 최저 청년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취업, 자산형성, 일상 전반에 걸쳐 청년 삶 제약 요소 상존

- (일자리) 기업은 경력·수시 채용을 선호하는 가운데 체계적인 진로 탐색·실무경험 기회가 여전히 부족*하고, 직장 적응을 위한 제도적 지원 부족 → '쉬었음' 청년 약 40만 명

* 취업 준비 애로 사유 : 경력직 선호(26.3%), 실무경험 기회 부족(17.2%) ('23년, 한경협)

- (자산) 청년들의 자산형성 욕구는 높으나 자산형성 기회가 제한적인 상황 → 위험자산 투자 확대 및 생활고 차원의 부채 증가

* 29세 이하 자산 대비 부채 비율:('15년) 16.8% → ('23년) 32.1%(전연령대 중 1위)

- (일상) 고물가·고금리로 청년들의 학비, 교통비 등 필수 생활비 부담이 증가하고, 청년 우울증, 번아웃 등 마음건강 악화

➡ 쉬었음 청년 최소화 및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빈틈없는 취업 지원, 체계적인 자산형성 지원

➡ 청년의 주거·생활 걱정 해소 등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 추진

□ 청년 삶 개선과 연관성이 높은 과제 중심으로 재구조화 추진

- (과제 제외) 코로나19 해소, 대체 사업 추진 등으로 사업 종료·통폐합*, 청년 삶 개선과 관련이 낮은 전 연령 대상 사업** 등 제외

* 청년특별고용촉진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희망적금 등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이륜차 배달종사자 보호, 담유지·관리 등

- (지원 확대) 일경험 기회 등 청년들의 수요와 만족도가 높은 사업은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취약 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

- (연계 강화) 수요자 관점에서 필요한 정책 연계를 강화*해 효과성 증대

* 군장병 및 가구소득 250% 청년까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 청년도약계좌,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시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연계 등

➡ '23년도 390개 사업에서 '24년도 356개 사업으로 개편하여 집중 지원

Ⅲ. 2024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총괄>

- 재정지출 최소화 기조 하, 청년 수요와 정책 효과성이 높은 청년정책을 집중 지원하고 취약 청년에 대해 두텁게 지원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과제(개)	308	376	390	356
예산(조원)	23.8	24.6	25.4	27.0

- 중앙부처 시행계획 주요 추진 목표

분야	기본계획 수정(~'25)	'23년 지원내용	'24년 시행계획
일자리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매년 일경험 프로그램 8만+α 지원 등) ·청년친화적 공정 고용문화 확립	·청년 일경험 8.4만명 지원 ·재학생, NEET 청년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공정채용법」 개정 추진	·청년 일경험 10만명 지원 ·15만명 재학생에게 맞춤형 고용 서비스 제공 ·창업 주기별 촘촘히 지원하고, 글로벌 진출 지원 확대
주거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등 청년 맞춤형 주택 균형 공급 (~27년, 58만호) ·43.5만 청년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	·청년층 공공분양 5.3만호, 공공 임대 4.8만호 공급 ·초장기 모기지(최대50년) 지원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청년층 공공분양 6.1만호, 공공 임대 5.1만호 공급 ·자산형성+내집마련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통장' 출시 ·신생아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지원
교육	·미래사회 선도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 ·교육격차 해소로 교육 접근성 강화 ·지역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지자체·산·학·연 협업체계 강화	·첨단분야 인재양성방안 마련 * 바이오헬스, 반도체, 환경·에너지 등 ·교육과 일자리 연계한 맞춤형 역량강화 지원, 대학의 역할 강화	·국가적 수준의 중장기 인재양성 기본계획 수립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확대 및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대폭 경감 ·지역대학·산업 연계로 지역인재 양성
복지·문화	·청년도약계좌 신설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 ·취약청년 긴급자금 '25년까지 1조원 지원 ·고립·은둔청년 등 취약청년 발굴·지원 강화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청년도약계좌 신설(23.6) 및 청년 병사 목돈마련 등 자산형성 지원 ·자립준비, 가족돌봄, 고립·은둔 청년 등 취약청년 지원체계 구축	·수혜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청년도약계좌 제도 개선 *희망적금 연계, 중도해지요건 완화 등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시범사업 추진 ·청년 마음건강 초기진단 지원
참여·권리	·원칙적으로 모든 정부위원회를 청년참여위원회로 지정 ·청년친화도시 지정 등 청년 친화적 사회 기반 조성	·청년참여 위원회 확대 지정(221개)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대폭 확대(현 9개부처 → 장관급 24개 부처) ·청년정책 중앙지원센터 설치·운영 ·온라인 청년정책 통합시스템 구축 ·청년지표 신규 개발 및 청년친화 도시 지정운영 방안 마련	·지자체 위원회까지 청년참여 확대 ·청년보좌역·자문단 운영 내실화 * 제안내용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인센티브 강화, 우수사례 공유 ·17개 시·도별 거점 청년지원센터 지정·운영 ·온라인 통합시스템 구축 지속 추진 ·청년친화도시 지정(3~5개)

1

시행계획 개요

- (총괄) 35개 중앙행정기관 총 356개 과제, 약 27.0조원 투입
- (분야별) 과제수 기준 일자리 분야(124개), 예산 기준 주거 분야(11.5조) 최다

분 야	과제수	청년예산(억원)		
		'23년	'24년	(비중,%)
I. 일자리	124	57,731	58,854	21.7
II. 주 거	28	104,201	115,911	42.9
III. 교 육	117	69,402	75,378	27.9
IV. 복지·문화	44	19,531	19,083	7.0
V. 참여·권리	43	888	1,233	0.5
※ 기타(非청년정책 등 제외)		2,425		
합 계	356개	254,178	270,459	100%

□ (기관별)

기관명(과제수順)		과제수(개)					청년예산(억원)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23년	'24년
국토교통부	40	8	23	6	1	2	103,236	115,118
교육부	39	2	2	33	1	1	60,589	64,236
문화체육관광부	37	8		13	15	1	3,025	1,6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4	10		24			3,739	3,060
고용노동부	32	26		5		1	43,297	43,986
중소벤처기업부	28	21		6		1	5,969	6,724
농림축산식품부	20	11	1	6	1	1	7,786	10,794
국무조정실	13	1				12	343	740
여성가족부	9	3		1	5		276	372
보건복지부	9				9		2,519	3,015
금융위원회	7	1	2		4		7,430	3,832
외교부	7					7	491	793
환경부	7	2		2	1	2	510	476
산업통상자원부	6	3		3			1,933	2,241
산림청	6	3		2		1	18	70
식품의약품안전처	6			5	1		75	102
해양수산부	5	2		3			51	52
특허청	5	2		3			92	99
국방부	5	2		1	2		7,047	10,465
인사혁신처	5	4				1	0	2
국가보훈부	4	2				2	133	68
농촌진흥청	4	2		1		1	88	40
행정안전부	4	1				3	2,078	830
병무청	4	2		1	1		916	1,646
기획재정부	4	1			3		15	0
문화재청	3	2				1	54	35
국민권익위원회	2	1				1	2	2
통일부	2	1				1	5	7
재외동포청	2					2	-	7
법무부	2	1		1			-	1
방송통신위원회	1			1			3	0
방위사업청	1	1					27	16
통계청	1					1	0	0
공정거래위원회	1					1	4	0
조달청	1	1					2	0
	356	124	28	117	44	43	251,753	270,459

I. 일자리 분야

청년고용 지원제도 다각화 및 청년이 원하는 일터 조성 지원

- ◇ 맞춤형 구직 지원 강화 및 민관협업 일경험 확대로 노동시장 진입 촉진
- ◇ 공정 채용과 합리적 직장환경 조성을 통해 청년의 노동시장 이탈 예방

1 청년 취업역량 강화

① 민관협업을 통한 취업역량 제고 지원

- 민간·공공분야 다양한 유형의 일경험을 연간 10만명 이상 지원
(‘23 8.4만명)하고, 민관협업을 통해 현장형 실무인재 양성

일경험 분야 주요 사업

구분	주요사업	주요내용
일경험 지원	청년일경험지원사업 고용부	▶ 기업과 협업하여 실전형 프로젝트, 인턴십 프로그램 등 지원 - (‘23) 2.0만명 - (‘24) 4.8만명
	중앙부처 청년인턴 확대 국조실	▶ 중앙부처 청년인턴 : (‘23) 2천명 → (‘24) 5천명 - 진로상담·역량 개발 등 취업서비스 연계 제공 (‘24.3.5. 청년 민생토론회)
	공공기관 청년인턴 확대 기재부	▶ 공공기관 청년인턴 : (‘23) 2만명 → (‘24) 2.2만명
	부처별 특화 일경험 지원 5개부처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ICT학점연계프로젝트 인턴십, 도시재생청년인턴십 등 (‘23) 3.8만명 → (‘24) 7.3만명

- AI·반도체 등 청년이 선호하는 첨단산업·신산업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기업 주도의 청년 맞춤형 훈련 지원

신산업·첨단 분야 훈련 주요 사업

구분	주요사업	주요내용
첨단· 신산업 분야	K-디지털 트레이닝 고용부	▶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실무인재 양성 - 확대 시행 (‘23) 3.6만명 → (‘24) 4.4만명
	K-디지털 플랫폼 고용부	▶ ‘디지털 융합훈련 플랫폼’ 활용, 중소기업 재직자· 구직 청년 등에게 다양한 훈련 제공 및 시설 공유 - (‘23) 35개소 → (‘24) 55개소 운영
	에코 스타트업 창업 지원 환경부	▶ 녹색산업분야 예비창업자·초기창업기업 성장 지원 - (‘23) 155개 → (‘24) 210개

②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구직 청년에 대한 채용지원 및 청년 채용 기업에 대한 장려금 지급 강화
 - 구직단념청년의 구직의욕 제고 위해 취업 인센티브(최대 100만원) 신설
-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신설, 일자리 채용 청년지원금 도입 등으로 청년고용 촉진 유도 지속

청년 구직자 지원 주요 사업

구분	주요사업	주요내용
구직청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고용부	▶ 취업애로청년 정규직 채용후 6개월간 고용유지시 인건비(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23) 9만명 → ('24) 12.5만명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고용부	▶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료 50% 지원 - ('24, 신규) 242억원
	일자리 채용 청년지원금 고용부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3개월·6개월 각 100만원씩 지급 - ('24, 신규) 24,800명
구직단념 청년	구직단념청년 등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촉진 지원 고용부	▶ 구직단념청년 대상 자신감 회복,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지원인원) ('23) 8천명 → ('24) 9천명 -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23) 최대 300만원 → ('24) 최대 350만원(취업인센티브 50만원 신설)

② 창업활동 활성화 및 내실화

- ① 청년들이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창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창업 저변을 확대하고, 글로벌 등 신시장 진출 강화

청년 창업 주기별 주요 지원

구분	주요사업	주요내용
아이디어 발굴	창업경진대회 10개부처 (도전! K-스타트업)	▶ 유망한 창업아이템 보유한 (예비)창업자 경연 대회 - 후속 연계지원 대상 확대 ('23) 2팀 → ('24) 6팀 - 지역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중심대학 기반 클럽리그 강화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 과기부	▶ ICT 분야 민·관·지역 합동 스타트업 경진대회 개최 및 선정기업 후속지원(네트워킹 등) 강화 - 선정기업 규모 : ('23) 28개 → ('24) 30개

구분	주요사업	주요내용
교육·사업화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중기부	▶ 생애 최초 창업자 대상으로 맞춤형 창업교육, 사업화자금, 멘토강화 및 팀빌딩 등 지원 - ('23) 120명, 79억원 → ('24) 78명, 51억원
	청년창업사관학교 중기부	▶ 유망 아이템, 혁신기술 보유 청년 발굴 및 창업 초단계 패키지 지원 - 민간주도형 청창사 : ('23) 4개소 → ('24) 5개소 - 지역 주요 거점 청년창업사관학교와 글로벌 기업(구글, 엔비디아 등) 간 협업프로그램 신설
	창업중심대학 중기부	▶ 지역 청년창업 허브로서 창업지원 우수대학 지정 →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23) 9개 대학, 750개사 → ('24) 9개 대학, 750개사 * 지원기업 중 40% 내외로 청년창업기업 지원
	글로벌 창업 중기부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 교육을 제공하고, 우수자는 사업화자금 연계 지원 ▶ 글로벌 수준 기술교육과 창업기획자 네트워킹 패키지 지원 - 사업화 지원한도 확대(0.5억원 → 1.5억원) 및 글로벌 VC 등을 활용한 현지보육 강화 ▶ 해외진출을 위한 기업별 맞춤형 현지 액셀러레이팅, 현지 진출 지원금 등 지원 - ('23) 140개사, 99억원 → ('24) 140개사, 99억원
	팁스 TIPS 중기부	▶ 민간투자자과 정부R&D 및 사업화·해외마케팅 자금을 연계지원하여 유망 창업기업 발굴·육성 - 지원기업 확대 ('23) 720개사 → ('24) 900개사 * 청년을 포함한 TIPS 프로그램 전체 지원규모 - 유망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 투자 받은 스타트업 대상 글로벌 팁스 시범 운영
	메이커 스페이스 중기부	▶ 제조 창업자가 창의적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도록 메이커 스페이스의 장비·시설 활용 등 지원 - 기 선정된 스페이스 : ('23) 163개 → ('24) 109개 - 컨소시엄형 스페이스^(23신설) : ('23) 5개 → ('24) 5개
자금·벤처투자	청년전용 창업자금 중기부	▶ 우수 아이디어 보유 청년창업기업 융자(2억원) 지원 - ('23) 2,316개사 → ('24) 3,000개사
	청년창업펀드 중기부	▶ 청년창업기업 벤처투자 펀드 운영 규모 확대 - ('23) 967억원 조성 → ('24) 667억원 추가 조성
	청년창업기업 보증제공 중기부	▶ 아이디어·기술력 보유 청년창업기업 보증 지원 - 보증규모 확대 ('23) 5,000억원 → ('24) 6,000억원
재창업	청년 다시-Dream 프로그램 중기부	▶ 유망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예비)재창업자 발굴 → 사업화자금 및 교육·멘토링 등 패키지 지원 - ('23) 43명 → ('24) 113명

② 농림어업분야 창업지원 강화하고, 식품·문화콘텐츠 등 분야별 창업 지속 지원

분야별 주요 지원 사업

분야	주요사업	주요내용
농림어업	청년농·어업인 영농·어정착지원 농식품·해수부	▶ 청년농·어업인의 창업 초기 경영 안정을 위한 정착지원 규모 확대 - 영농:('23) 4천명, 551억원 → ('24) 5천명, 957억원 - 영어:('23) 225명, 27억원 → ('24) 290명, 35.6억원
	농지 선임대후매도 농식품부	▶ 농지 매입자금이 부족한 청년농의 영농기반 마련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지 매입 지원 - ('23) 20ha, 81.6억원 → ('24) 40ha, 171.2억원
	(신규) 산림산업 창업지원 산림청	▶ 청년 산림인의 취·창업 및 미래 산림인 육성을 위한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창업 교육 등 지원 - ('24) 850명, 17억원
식품	청년식품 창업성장 지원사업 농식품부	▶ 식품 분야 청년창업자 대상 전문교육 및 시제품 제작 지원을 통해 역량 증진 및 사업화 능력 제고 - ('23) 55팀, 11.2억원 → ('24) 55팀, 11.2억원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농식품부	▶ 외식창업 희망 청년에게 실제 창업 전 사업장 운영기회 제공 - ('23) 7개소, 10.4억원 → ('24) 4개소, 7.6억원
문화 콘텐츠	1인 미디어 창작자 및 스타트업 지원 과기부	▶ 창작자의 콘텐츠 제작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스튜디오 운영, 인력 양성 등 지원 - ('23) 5개소, 300팀 → ('24) 5개소 300팀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 문체부	▶ 전통문화산업에 특화된 예비 및 초기창업 지원 - ('23) 115팀 → ('24) 95팀
	게임기획 지원 문체부	▶ 게임산업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대상 게임기획·개발지원, 컨설팅 등 - ('23) 40개사 → ('24) 45개사

③ 공정채용 기반 구축 및 직장문화 개선

① 청년의 공정한 출발 지원

○ 공정채용문화 확산

- 기업 대상 공정채용 1:1 상담창구 마련, 컨설팅 지원기업 확대 (200개 기업) 및 공정채용 이해 제고를 위한 CEO 교육 신설 고용부

- 채용절차법 위반 점검(1,200개소)하고, 불법적인 채용취소, 해고 등으로 피해받은 청년들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 제공(70건 이상)^{고용부}

○ 공공부문 채용절차 개선 및 비위 근절

-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추진('24.2월~10월)^{권익위}
-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신고 사건은 엄정 조치하고, 공정채용 전문교육 및 사규 컨설팅 통해 채용비리 예방^{권익위}

② 청년이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

○ 청년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확산

- 청년 선호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선택·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을 시행하는 기업에 장려금 지급('24년 427억원)^{고용부}
-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500개소)하고 선정기업 관리 강화, 온·오프라인 채용박람회 개최 및 서포터즈 지원 확대^{고용부}

○ 일·가정 양립 지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및 제도 조기안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개편을 위한 법개정 지속^{** 고용부}

*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450만원)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제출('23.10.5.)

○ 생산적 공직문화 조성

- 청년세대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적응을 도모하고 일하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처우개선, 청년특화 국외훈련, 멘토링 등 진행^{인사처}

④ 청년 일터 안전망 강화 및 노동권익 보장

① 일하는 청년 사회보장 강화

- 방과후강사('24.1~), 관광통역안내원('23.7~) 등 산재보험에 적용되는 직종을 확대하여 산업 재해로부터 청년을 촘촘하게 보호^{고용부}

- 직종별 표준계약서 보급 지속 확대, 기존 표준계약서 실태점검 등을 통해 불공정한 규정 등 개선 유도 ^{고용부}

② 청년 노동권의 보장

- 중소IT벤처기업, 프랜차이즈 등 청년이 주로 취업하는 중소기업(30인 미만) 대상으로 노동질서 확립 위한 현장 예방 활동 ^{고용부}

* ①임금체불 예방 ②최저임금 준수 ③서면근로계약 체결 ④임금명세서 교부 점검

-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통한 근로자 권익 보호 ^{고용부}

- 청년층 다수 종사 기업(IT·제조업 등) 대상 컨설팅·교육 지원, 공인 노무사 무료 상담·권리구제 등으로 직장내괴롭힘으로부터 청년 보호
- 유튜브 쇼츠 영상 등을 활용한 홍보로 상호존중 직장문화 인식 확산 및 현장의 자율적 개선 유도

- 청년들의 구직 단념 사전 예방 및 직장 적응 지원 ^{고용부}

- 직장 적응 및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4만명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직장 이탈 및 실업 장기화 예방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CEO·중간관리자·인사담당자 대상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 및 신입직원(청년) 대상 직장 적응지원 교육 제공

** 미취업 청년 등의 구직단념을 예방하기 위해 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필요한 청년고용정책 연계

-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 ^{여가부}

- 청년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270회 이상) 교육 사각지대 청년 대상 홍보로 참여 유도

* 직업계고 현장 실습생, 고3 예비사회인, 취업준비생, 소규모 사업장 소속 사회초년생 등 교육 기회 및 접근성 부족 청년 우선 지원

II. 주거 분야

청년 주택공급 지속 확대 및 주택 구입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 ◇ 청년 공공임대·공공분양을 지속 확대하고, 내집마련+자산형성 동시 지원
- ◇ 연합기숙사 확대, 기숙사비 카드결제 및 분할납부 본격 추진

1 청년 주택 공급 확대

- ① 청년층 뉴:홈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23년 5.3만호→'24년 6.1만호)
-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에 공급하고, 나눔형·선택형의 경우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최장 40년 만기의 저금리 전용 모기지 지원^{국토부}

유형	사업개요	목표 공급 규모 (단위: 만호)
공공분양 뉴:홈		6.1
나눔형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이하 ▶ 시세 70% 이하로 거주(5년) 후 공공 환매(차익 70% 귀속)	* 세부 유형별 공급물량은 공급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선택형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이하 ▶ 시세 대비 낮은 비용으로 임대거주(6년) 후 분양여부 선택 * 분양가 = (입주시 감정가+분양시 감정가) / 2	
일반형	▶ 추첨제로 청년층 참여기회 확대(시세 80% 수준)	

- ② 수도권, 교통 등 우수입지 중심으로 공공임대 공급('24년 5.1만호)
-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역세권·도심 등 선호입지에 청년 맞춤형 주거공간과 서비스를 결합하는 등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국토부}

유형	사업개요	목표 공급 규모 (단위: 만호)
통합공공임대	▶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무주택 청년에게 소득 연계해 저렴하게 공급 * 중위소득 150% 이하(일반), 100% 이하(특별)	1.2
(특화주택)	▶ 중소기업 및 산단근로자, 청년 등에게 일자리와 연계한 지원주택 공급 *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	0.2
	▶ 교통 우수입지에 청년층 선호 주거공간, 공용시설, 서비스 결합한 임대주택 공급	0.1
매입임대	▶ 월평균소득 100% 이하 청년대상, 시세 약 40~50% 수준 임대	1.4

유형			사업개요	목표 공급 규모 (단위: 만호)
(특화주택)	청년 역세권	▶ 다가구, 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한 보증금·임대료로 공급	* 세부 유형별 공급 물량은 공급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역세권 리모델링형	▶ 도심 내 노후주택, 호텔 상가 등 비주택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		
	기숙사형	▶ 학교 인근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대학 등 운영기관에게 임대 또는 기숙사로 공급		
전세임대			▶ 월평균소득 100% 이하 청년대상, 입주자부담 100~200만원	1.05
공공지원 민간임대			▶ 월평균소득 120% 이하 청년대상, 임대료 주변시세 약85% 주택 공급	0.9

③ 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카드·분할 납부 확대

- 대학생 주거 안정을 위한 국립대 기숙사 확충(부산대·금오공대) 및 도심내 국·공유 부지 활용해 연합기숙사 건립(4건) 교육부
- 기숙사비 카드 결제 및 현금 분할납부 참여대학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대상 주거장학금 신설(25~)을 위한 예산 확보 추진 교육부

② 전월세 비용 경감

① 부모와 별도거주 수급 청년에게 주거급여 분리지급

-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별도 주거급여 지급(7천 가구) 국토부
- * 선정기준 확대(기준중위소득 '2347→'2448% 이하) 및 기준임대료 최대 1.1~2.7% (급지·가구원수 고려) 인상

② 청년 주거비용 부담 완화

-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가입요건 완화 및 우대금리 확대한 '청년주택드림통장' 출시('24.2)하고 군장병도 가입 허용 국토부
- * ① 소득요건 3.6 → 5천만원 ② 세대주 요건 폐지 ③ 우대금리 1.5%p→1.7%p
-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도약계좌 만기 시 주택드림통장에 일시 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청약 당첨 시 청년주택드림대출* 연계 지원(25) 국토부
-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 최저 2.2%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 80%까지 구입자금 지원

-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연장('24~'26)해 저소득·무주택·독립 청년에게 월 20만원까지 월세 지원(13만명) ^{국토부}

<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

구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월세 특별지원
소득요건	중위 47% 이하	가구소득 중위 100% 이하 & 본인소득 중위 60% 이하
지원내용	1인가구 기준 16.4~33.0만원 * 중위 30% 이상은 자부담 有	월 최대 20만원 * 최대 12개월, 기수혜자도 가능

- 보증부 월세대출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중기청년 전세대출 연장 시 원금 분할상환 유예** 등 청년전용 전·월세 저리대출 지원(13만 가구) ^{국토부}

* (요건) 보증금 5천만원 → 6.5천만원 이하 / (대출한도) 35백만원 → 45백만원

** (현재) 원금 10% 이상 상환 또는 0.1%p 금리 가산 → (개선) 연장 1회 시 미적용

<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 프로그램 >

구분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중기청년 전세대출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
지원대상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보증금 6.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대출조건	대출한도 2억원 대출금리 1.8~2.7%	대출한도 1억원 대출금리 1.5%	보증금 4,500만원, 1.3% 월세 50만원, 0~1%

- 출산 2년 내 무주택 가구에게 대출한도와 금리 혜택을 대폭 강화해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지원, 추가 출산 시 추가 우대(1명당 0.2%p)

<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프로그램 >

구분	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연소득 1.3억 이하 순자산 4.69억 이하	연소득 1.3억 이하 순자산 3.45억 이하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 ² 이하 주택가 9억 이하	전용면적 85m ² 이하 전세가 5억 이하
금리/한도	1.6~3.3%/5억원	1.1~3.0%/3억원

- 주택을 원활히 임차할 수 있도록 청년전용 전·월세자금 보증(전세 2억, 월세 1,200만원)을 지원하고 장기 정책모기지(40, 50년 만기) 지속 공급 ^{금융위}

③ 주거 취약청년 지원

① 고시원·반지하 등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

- 주거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우선공급 지원 지속 확대(50개 이상 지자체)하고, 이사비 지원(40만원) 국토부
- 자립준비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 2,000호 우선공급하고, 거주지역·취업계획·소득 등 고려해 맞춤형 주거상담 서비스 지원 국토부

② 취약 주거지 근본적 개선

- 불법 대수선(가구분할, 일명 '방쪼개기') 방지를 위해 현장조사 거부 시 과태료 신설, 이행강제금 상향하도록 「건축법」 개정 추진 국토부

③ 청년 임차인 보호 강화

- 원룸 등 청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규모 주택의 부당한 관리비 표시 및 허위광고 여부를 조사하고, 공인중개사 규정 준수여부 단속·점검 국토부
- 전세사기 피해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피해자 신청·접수부터 결정·통지까지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한 시스템 구축 국토부

* 다가구, 신탁사기, 근생빌라 임차인에 대해 다가구 매입임대 요건 완화, 전세임대 제공 등

④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 공유주택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위한 펀드를 조성해 청년·대학생 등 1인 가구 맞춤형 공유주택 공급 유도(40호) 국토부
- 5개 광역시(대구·광주·대전·부산·울산) 도심에 청년인재 정착 및 지역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심융합특구 기본·실시계획 수립 지속 지원 국토부
- 청년층 등의 지역 이전 및 정착을 위해 주거·생활 인프라·생활 서비스가 복합된 주거단지 조성 확대(10개 지자체 선정) 국토부

III. 교육 분야

미래 핵심역량 및 산업·지역 수요 중심 교육 강화

- ◇ 국가장학금 확대 등 모든 청년에게 고른 교육기회 보장
- ◇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와 함께 경력개발·진로탐색까지 폭넓게 지원

1 청년 미래역량 강화

① 국가 인재양성 기반 강화

- 국가적 수준의 중·장기 인재양성 정책목표, 규제 개선사항 등을 담은 '국가인재양성기본계획(시안)' 수립('24.上) ^{교육부}
- 기 설정한 5대 핵심분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지속 추진 ^{관계부처}
 - * A 항공·우주미래모빌리티('24연중) B 바이오헬스('23.4.6.) C 첨단부품·소재, 반도체('22.7.19.)
D 디지털('22.8.22.) E 환경·에너지('23.5.26.)

② 특화분야 전문인재 양성 확대

- 효율적인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타 부처(8개)와 협업하여 16개 분야 대학 특성화 및 인재양성 지원 ^{교육부}
 - * ('23년) 1,052억원, 7,560명 양성 → ('24년) 1,188억원, 8,453명 양성(목표)
-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주력산업 고도화를 선도할 56개 분야 석·박사 혁신인재(4,226명 목표) 양성 및 해외 연구기관 공동프로젝트(107명) 지원 ^{산업부}
 - * 산업 혁신인재 성장지원(R&D) : ('23년) 135,658백만원 → ('24년) 157,479백만원
- 이공계 및 ICT, SW 분야의 고급·전문인재 집중 양성을 위해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신설(3,000백만원) 및 해외 교육·인턴십* 확대 ^{과기부}
 - * ICT 고급인재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 인문사회, 예술체육, 이공계 등 분야별 우수인재 장학금 지속 지원 ^{교육부·과기부}

- 산업분야별 특화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부처별 다양한 인재양성 사업 지속 추진 관계부처

주요 특화분야 전문인재 양성사업

분야	인재양성 사업	주요내용
디지털 신산업	스마트제조 인력양성 중기부	▶ 스마트랩 활용 스마트공장 통합 전문인력 양성 - ('23) 900명, 5.3억원 → ('24) 900명, 5.3억원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중기부	▶ 벤처·스타트업 취업연계 SW/콘텐츠 개발자 양성 - ('23) 800명, 100억원 → ('24) 800명, 100억원
	정보보호 특성화 대학 과기부	▶ 대학 정보보호 관련 학과·전공 지원 - ('23) 150명, 25억원 → ('24) 150명, 35억
	AI·디지털 기반 미디어 융합인재 과기부	▶ 미디어 신시장 창출을 견인할 기술 융합인재 양성 - ('24 신규) 285명, 8.1억원
	제약 스마트공장 혁신기술 인재양성 식약처	▶ 제약 스마트공장을 선도하는 핵심인재 양성 확대 - ('23) 16명, 0.65억원 → ('24) 32명, 2억원
그린 · 에너지	녹색융합기술 인재양성 환경부	▶ 탄소중립, 순환경제 등 미래 환경분야 선도 인재양성 - 13개 분야 특성화대학원, 16개 전문인력 양성과정
	미래에너지 인력양성 산업부	▶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에너지 기술인력 양성방안 집중 - ('23) 1,540명, 464억 → ('24) 1,807명, 542억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농식품부	▶ 스마트팜 실습위주의 장기(20개월) 교육 제공 - ('23) 600명, 80억원 → ('24) 600명, 80억원
문화 콘텐츠 · 지식재산	저작권기술 글로벌 인재양성 문체부	▶ 저작권 전문지식을 갖춘 글로벌 고급인재 양성 - ('23) 3개 대학, 30명 → ('24) 7개 대학, 140명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문체부	▶ 이스포츠산업 전반의 전문·현장인재 양성 - ('23) 5개 기관 → ('24) 7개 기관
	지식재산 인재 양성 특허청	▶ IP중점대학, 캠퍼스특허유니버시아드 등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 ('23) 12,261명 → ('24) 14,150명

③ 인재 양성 허브로서 대학의 역할 강화

- 수도권·비수도권 대학이 첨단분야 융복합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운영 하고 전공과 무관하게 희망자에게 첨단분야 교육과정 이수 지원 교육부
- ※ 첨단분야 혁신 융합대학: ('23) 13개 분야 → ('24) 18개 분야(5개 분야 신규선정)
- SW전공·융합 교육과정 개편, 산학협력 과제·인턴십 등 SW중심 대학 운영 확대('23년 51교→'24년 58교) 과기부
- 대학의 자율적 혁신 지원을 위해 국립대학 육성사업* 및 대학·전문 대학·지방대학 일반재정지원** 확대 교육부

* 국립대학 1교당 평균 지원 규모 : ('23년) 124억원 → ('24년) 154억원

** 1교당 평균 지원 규모 : ('23년) 대학 69억원/전문대학 54억원 → ('24년) 대학 76억원/전문대학 60억원

② 고른 교육 기회 보장

① 대학생 학비 부담 완화

- 저소득층 대학생이 고등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장학금(I 유형) 지원단가 대폭 인상^{교육부}
 -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1~3구간은 +50만원, 4~6구간은 +30만원 추가 지원
 - ※ '25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를 약 150만 명까지 확대('24.3.5. 청년 민생토론회)

< '24년 국가장학금 지원구간별 연간 지원단가 인상(단위:만원) >

구분			기초·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2023년 →2024년	I 유형		700(둘째 전액) → 전액	520→570			390→420		350		
	다자녀	첫째·둘째	450→480				450				
		셋째이상	전액								

- 근로장학금 지원대상을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해 더 많은 대학생에게 근로 경험을 제공하고, 근로단가 인상^{교육부}
 - * [지원 인원] 교외 6.5만명(전년대비 5천명↑), 교내 7.5만명(1.5만명↑)
 - [근로 단가] 교외 12,220원(전년대비 1,070원↑), 교내 9,860원(240원↑)
 - ※ '25년부터 근로장학금 지원 규모를 약 20만 명까지 확대('24.3.5. 청년 민생토론회)
- 중소기업* 또는 영농·농식품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취업연계 맞춤형 인재 장학금 지속 지원^{교육부·농식품부}
 - * [희망사다리 장학금] 4,650명 대상 등록금 및 취·창업지원금 200만원 지원
 - ** [농업분야 취·창업 연계장학금] 1,720명 대상 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250만원 지원

②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대폭 경감

- '241학기 1.7% 금리 동결하고, 대출 상환 개시 기준 소득 인상(154만원↑) 및 생활비대출 연간 한도를 350→400만원으로 확대하여 청년 학업유지 지원^{교육부}
- 2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지원 대상을 학자금지원 9구간까지 확대*하고, 이자면제 대상과 면제 기간 확대^{교육부}
 - * (기존) 8구간 → (확대) 등록금대출은 9구간까지, 생활비대출은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전후 비교('23.12. 개정, '24.7. 시행) >

구분	대상	범위	이자면제 기간
현행	기초·차상위·다자녀	등록금 + 생활비	재학 중
개정	기초·차상위·다자녀 1~5구간	등록금 + 생활비	취업 후 상환 시작 전 졸업 후 2년 내 상환시작 전

③ 군 복무 청년 등의 학습 지원

- 군 복무 중 청년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대학강좌 수강 및 군 복무 경험 학점인정 기반을 확대*하고 자기개발비용 지원**^{국방부}

* [원격강좌] '23년 179교 → '24년 182교 /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23년 82교→'24년 88교

** 병 대상 연간 1인당 12만 원 지원(학습비용·시험응시료 등)

- 사회복무요원의 원격강좌 학점취득 수강료를 지원하고 사회복귀 준비금 지원을 확대,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대상자 확대 추진^{병무청}

* ('23년) 원리금의 71% 매칭지원 → 납입액의 100% 매칭지원

** 잔여복무기간 6개월 이상자 → 1개월 이상자로 개선

④ 취약청년 지원 강화

- 평생교육바우처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23년 6만명→'24년 8만명)해 소외 계층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훈련 교육기관 지속 발굴^{교육부}
- 자립준비청년에게 디지털 창업교육, 미디어 창작 교육, 디지털 기업 인턴십 등을 통해 디지털 분야 진로설계 신규 지원(75명)^{과기부}
-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진로탐색, 자립 등 건강한 성장을 지속 지원^{여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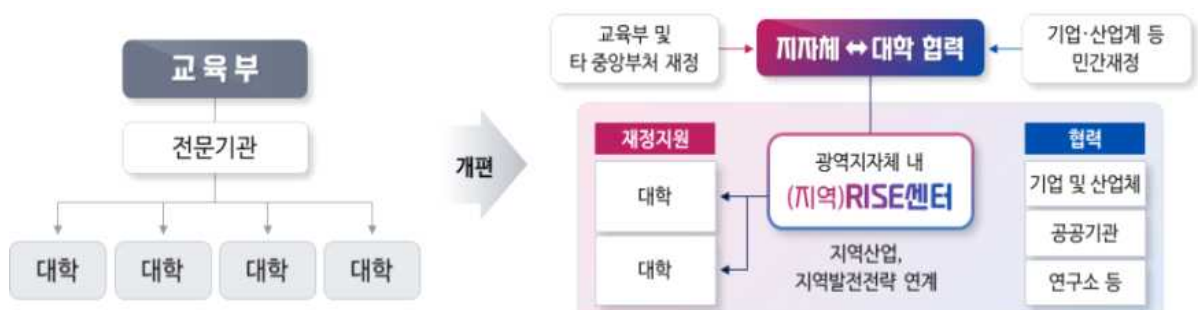
③ 지역과 산업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 확대

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대학-산업 연계 지원

-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시도별 RISE* 추진체계 구축 및 5개년 계획 수립 추진 지원^{교육부}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 대학의 지역발전 허브화 및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육성을 위한 지자체 주도의 대학지원

※ (~'24년) RISE 추진체계(전담부서전담기관) 구축 및 RISE 계획('25~'29) 수립→ ('25년) 전 지역 시행



- 직업계고 중심으로 지자체(교육청)-지역대학-기업 협업하여 지역 고졸인재 육성, 취업까지 연계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 확대 ^{교육부}

* ('23년) 12개 지구 → ('24년) 14개 지구(2개 지구 신규지정 예정)

- 전문대학-지자체 협력으로 지역 수요에 맞는 평생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지역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50개) 지속 추진 ^{교육부}

② 고졸 청년 취업 지원

- 신기술·신산업분야 중심으로 직업계고 학과 개편 및 전공지식-신기술 융합 기반 마이크로 교육과정(신규 10개) 도입 지원 ^{교육부}
- 17개 거점학교 중심으로 미취업·진로미결정 직업계고 졸업생에게 진로상담 및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릿지 학년' 도입(신규) ^{교육부}

- 고졸 청년인재의 실무역량 제고 및 취업 활성화를 위해 현장실습을 내실화하고 현장실습 수당* 및 취업연계장려금** 지속 지원 ^{교육부}

* 월 60만원(최대 3개월) / ** 직업교육 참여 학생이 중소·중견기업 취업 시 500만원 지급

- 취업 희망 일반고 학생(3학년, 5,600명)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국민내일배움카드지원(일반고 특화훈련, 월 최대 20만원) ^{고용부}

③ 산업계 수요맞춤형 직무역량 강화

- 협약기업 맞춤형 집중교육과정을 통해 청년의 조기 취업 및 일·학업 병행을 지원하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확대 ^{교육부}

* 일반대: ('23) 11교 171억원 → ('24) 15교 258억원 / 전문대: ('23) 8교 96억원 → ('24) 8교 96억원

- 중소기업 근로자(채용예정자)의 직무역량 향상과 학위취득을 위해 맞춤형 중소기업 계약학과(88개) 운영 ^{중기부}

- 대학-민간 협력 기반 첨단 산업분야의 단기 집중 교육프로그램(부트 캠프)을 확대*하여 첨단산업 취업 희망 대학생 역량 강화 지원 ^{교육부}

* ('23년) 반도체분야 10교 시범운영(150억원) → ('24년) 분야 확대하여 42교 운영(630억원)

- 취업준비 청년(600명)을 대상으로 기업이 주도하여 집중 교육과정 운영 후 채용하는 '기업멤버십SW캠프' 추진 ^{과기부}

4 평생교육 및 진로·경력개발 지원

① 온라인 평생교육 기반 확대

- 국내·외 석학강좌, 신기술·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K-MOOC 강좌를 지속 개발하고, 학점인정·재직자 연수 등 이수증 활용 확대^{교육부}
- 청년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정부·지자체 등의 다양한 학습컨텐츠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종합 플랫폼 '온국민 평생배움터*' 구축(~'25)^{교육부}

* 2023년 청년정책 공모전 제안내용 반영

- 기업-교육기관 협업으로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온·오프라인 산업 맞춤형 단기직무능력인증과정(매치業) 개발·제공 확대^{교육부}

* ('23년) 11개 분야 72개 교육과정 → ('24년) 13개 분야 80개 이상 교육과정 제공

② 직장인 청년 경력개발 및 후학습 지원

- 고졸 후 재직 중인 청년의 역량 강화를 위한 후학습 장학금 지속 지원('24년 10,820명 지원 예정)^{교육부}
- 일학습병행 사업간 연계 강화를 위해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 공동훈련센터(59개)를 유형 구분 없이 통합 운영*하고, 경력개발 고도화 지원기관 확대(경상·전라·충청권 추가)^{고용부}
- 산업현장 일학습 병행* 참여대상을 재학생·재직자에서 '청년 구직자'까지 확대하여 학습근로자의 숙련도 향상 지원^{고용부}

* ('23년) 2,992억원 → ('24년) 3,116억원

③ 청년 진로탐색 지원

-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고교생까지 지원 확대(20교, 62억원)^{고용부}
- 디지털 분야 진로 탐색 중이거나 청년 SW개발자에게 선배청년 멘토를 매칭하여 진로설계 등 멘토링 지원 및 역량강화 유도^{과기부}
- 체험형 창업교육 등으로 청소년의 창업 진로탐색 및 기업가정신 함양^{중기부}

IV. 복지 · 문화 분야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개선 및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 ◇ 청년도약계좌 등 자산형성지원제도 개선 및 청년 결혼·출산부담 경감
- ◇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지원 확대 등 청년 사각지대 해소

1 사회출발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

① 자산형성지원제도 간 연계 및 지원 확대

- 청년도약계좌 가입·중도해지요건을 완화*하고,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해 지속적인 자산형성 지원 금융위

* 가구소득 중위 180%→250% 이하로 완화, 혼인·출산으로 인한 중도해지 시 이자소득 비과세
 ※ '25년부터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고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60% 수준으로 지급하는 방안 검토('24.3.5. 청년 민생토론회)

- 청년내일저축계좌 대국민 홍보 및 가입자 특성 분석 추진 복지부

주요사업	소득구간	납입액(만기)	지원혜택
청년도약계좌 금융위	▶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 250% 이하	월 납입한도 : 40~70만원	▶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 지원(최대 6%) ▶ 이자소득 등 비과세 혜택 적용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부	▶ 근로사업소득 월 230만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월 납입한도 : 10~50만원 (3년 만기)	▶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대비 1:1 정부매칭지원 ※ 기초·차상위 1:3 정부 매칭지원
* 가입자 수 : ('22) 4.2만명 → ('23) 9만명 → ('24 목표) 12만명			

- 병 봉급인상과 더불어 청년병사의 사회복귀 시 목돈마련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 원금의 100%를 전액 시 추가 지원 국방부

② 청년 부채 부담 경감

- 저소득 청년·대학생의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해 최대 1,200만원까지 저금리(3.6%~4.5%)로 대출 공급하는 햇살론유스 지속 지원 금융위

* (사업대상) 만19세~34세 이하 +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저소득 청년

- 금융채무를 연체 중인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에게 채무조정 특례를 제공하여 청년층의 경제적 재기 지원 금융위

* △이자, 연체이자 전액 감면 △미상각채권 원금 최대 30% 감면 △신청비용 면제

- 체계적인 자산관리를 위해 금융교육부터 재무상담·관리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 금융위

③ 결혼·출산 등 청년 생애주기를 고려한 지원 확대

- 맞벌이 부부가 청약 등 각종 청년정책 수혜에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개선 사항 지속 발굴 및 개선 국조실·전부처
-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 시, 기업·근로자의 추가 세부담이 없도록 지원하는 방안 검토 기재부

※ '24.3.5. 청년 민생토론회

②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①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지원 확대

-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진출 시 겪는 경제 부담 완화 및 자립기반 지원을 위해 자립수당 인상('23 40만원→'24 50만원) 및 지급대상 확대* 복지부

*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보호받은 청년
→ 18세 이전 타법상 보호시설 입소 등으로 조기 보호종료된 아동까지 지원('24.2월~)

- 자립준비청년의 맞춤형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자립지원전담기관 전담인력 확충,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확대* 복지부

* 자립지원전담기관 전담인력 ^{23년}180명→^{24년}230명/개인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23년}2,000명→^{24년}2,750명

②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체계 구축

-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 전담기관 지정, 인력 채용 및 자기돌봄비(연 200만원) 지급 등 발굴·지원체계 구축 추진 복지부

* 돌봄이 필요한 가족(중대수술, 노령, 장애 등)과 함께 거주하면서 돌봄을 전담으로 책임지고 있는 13~34세 청(소)년

- 고립·은둔 청년의 일상회복·사회 재진입 지원 시범사업('24~'25 시범, 이후 본사업 추진 검토)을 실시하고, 고립·은둔 조기 발굴체계* 마련 복지부

* 온라인 등 원스톱 접수창구 개설,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전담인력 배치 등

③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

-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수당(월 40만원) 지원기간 연장(3년→5년), 자립·취업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여가부

- 경제·사회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부모 대상 추가아동 양육비* 지원 및 지원 기준 상향(기준중위소득 '23년 60%→'24년 63%)하고,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단계적 도입**^{여가부}

* 만 25세~34세 이하, 월 5~10만원 지급

** '24.3.5. 청년 민생토론회

- 청년 1인가구의 고독·고립 방지를 위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을 '취약·위기 가족 지원사업(온가족보듬사업)'으로 재구조화하여 확대*^{여가부}

* 전국 가족센터(244개소) 중 일부 센터에서 추진('23 36개소)해왔으나, 180개소로 확대('24)

④ 청년 장애인 지원 내실화

- 장애대학(원)생 대상의 인적 지원(일반·전문교육지원인력), 보조기기 물적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고등교육활동 지원 활성화^{교육부}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학교 교육으로 예술활동 참여 및 자립기회를 제공하고, 전문 예술인(단체)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창·제작 준비과정 지원^{문화부}

③ 청년 건강 증진

①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 청년들에게 접근성이 높은 모바일 챗봇 마음건강 자가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 대상 정신건강 검진주기 단축 및 검사항목 확대**^{복지부}

*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우울증 등 자가검진 → 결과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병원 방문 안내

** 검진주기 단축(10년→2년), 검사항목 확대(우울증 →조현병, 조울증 등 추가) ('25년)

※ 검진결과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첫진료비 지원 검토,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는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 제공 및 취약청년 대상 본인부담금 경감 검토('24.3.5. 청년 민생토론회)

- 지역사회 청년 중독예방 및 청년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청년중독관리사업 실시^{복지부}

- 미래 세대 마약류 중독자 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해 중독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신속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중독재활센터 전국 확대*^{식약처}

* ('23) 3개소(서울, 부산, 대전) → ('24) 전국 17개소로 확대

- 취업준비, 진로고민 등 스트레스가 심한 청년 대상 국립공원 시설 이용료 할인(30%)으로 정신적·심리적 건강 증진 도모^{환경부}

② 청년 신체건강 인프라 확대

- 지역 청년이 주체가 되는 지역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구성하여 청년 신체·정신건강 분야 등 지역 사회서비스 제공 복지부
- 가족돌봄, 자립준비, 고립·은둔청년 등 취약청년에 대한 신체건강 바우처 이용을 확대('25~)하기 위한 방안 검토 ※ '24.3.5. 청년 민생토론회
- 청년층이 자주 이용하는 수영장·체육관 등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조성 지원('24 신규 건립 5개소, 계속 사업 29개소 지원) 문체부
 - * 헬스장, 수영장 등 생활체육시설에 대해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추진('24.3.5. 청년 민생토론회)
- 청년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대학생들에게 1천원에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 대폭 확대 농식품부

④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① 콘텐츠 분야 및 문화생활 참여 기반 강화

-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기반 신기술 기반 게임콘텐츠 제작 및 국립 문화시설 등을 활용한 공공향유형 콘텐츠 제작 지원 문체부
- 성년기 진입 청년(19세)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경험 기회 제공, 적극적 문화소비 주체로 성장토록 '문화예술패스*' 지원 문체부
 - * '05년생 16만명 대상, 공연전시 관람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패스 연간 최대 15만원 지원
- 관광·통학 등 타지역에 체류하는 청년들에게 주민등록을 하지 않더라도(생활인구 기반) 지역공공·문화시설, 숙박시설 할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검토('25~) 행안부 ※ '24.3.5. 청년 민생토론회

② 청년 예술가 및 청년 창작자 지원

- 신진예술인 및 예술인이 경제적인 사유로 예술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문체부
 - * (일반예술인) 3백만원, 20,000명 (신진예술인) 2백만원, 3,000명 대상 지원
- 신진작가와 전속계약을 맺은 단체(화랑 등) 지원을 통해 신진작가의 안정적 창작 환경 제공, 중소 화랑의 작가 발굴·육성 지원 문체부
 - * 전속작가 1인당 연간 창작활동비와 홍보비 15백만원 지원 등

V. 참여·권리 분야

청년정책 지역확산 및 청년 국제교류 확대

- ◇ 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거점 청년센터 운영하여 지역 청년정책 기반 강화
- ◇ 공공민간국제기구 등 다양한 해외진출 지원으로 청년이 원하는 국제교류 확대

1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 주도성 확대

① 청년 참여기반 확대 국조실

- 청년 참여 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 위원회에서 17개 광역 지방 자치단체 위원회까지 확대 국조실
- 청년과 기관을 이어주는 청년DB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공공 기관 등의 청년DB 활용실적을 청년정책 평가에 반영 국조실

② 청년 거버넌스 활성화

- 24개 중앙행정기관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500명) 운영하며 제안사항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인센티브 지원 국조실
- 일반 청년들이 직접 이슈 발굴 및 대안 마련하는 청년정책 공작소 (5회)를 개최하고, 중앙-지자체 간 청년정책 담당자 교류회 실시 국조실
- 탄소중립 서포터즈, 국토교통 온라인 패널, 2030 통일 토크 콘서트, 인사정책 토론회 등 분야별 다양한 소통채널 운영 환경부·국토부·통일부·인사처

2 청년정책 추진기반 내실화

① 법령·통계 정비를 통한 청년정책 지원

- 청년 구직자의 취업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감면 및 반환 관련 법령 개정 추진 법제처
- 2030 민원 분석을 통해 취약 청년, 주거·일자리 분야 등 청년정책 사각지대 개선점을 도출하고 각 부처 정책화 지원 권익위
- 제2차 '청년 삶 실태조사' 실시해 주거, 건강, 교육·훈련 등 8개 부문에 걸쳐 청년 삶을 다각적으로 분석 국조실

- 지자체 조례상 청년연령 등 고려해 청년통계등록부* 작성 대상 범위 확대(15~34세 → 15~39세) 통계청

* 우리나라 모든 청년에 대해 △지역, 성별, 연령 등 기본항목, △취업 청년의 임금소득, 창업·폐업 등 일자리, △부모와 동거 여부, 거처 형태 등의 정보 제공

② 청년 친화적 참여기반 조성 국조실

- 3~5개 내외 청년친화도시 지정('24.下)해 지역 정책과 청년 친화적 지역 인프라 구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중앙-지자체 청년정책책임관 협의(분기별) 및 중앙-지방 청조위 민간 위원 간담회(상시) 등 청년정책 지역협력체계 강화
- 광역시·도 청년센터 중심으로 지역여건에 맞춰 설계한 지역특화 청년사업 선정·지원('24.上)

③ 청년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

① 온·오프라인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국조실

- 부처별·지역별로 산재된 청년정책 정보를 실시간·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청년정책 통합체계 마련
 - 청년 개인 관심 분야·여건(소득, 지역) 등에 따라 맞춤형 청년정책 추천, 지원자격 진단, 상담, 신청까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중앙 청년지원센터 및 17개 시·도별 거점 청년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여 체계적 청년정책 수집·제공
 - 지역별로 편차 없는 통합적인 청년정책 제공을 통해 각 지역 청년들이 접하는 청년정책 서비스의 질 제고

② 청년과 함께 커가는 공동체

- 문화·관광·창업·마을기업 등 청년의 지역사회 활동 지속 지원

< 지역사회 연계 청년 활동·참여 주요사업 >

사업명	주요내용
①청년주도 균형발전타운 조성 행안부	▶ 인구감소 지역 등 청년인구 유입과 이주 정착 기반 마련(24개소)
②청년두레 지원 문체부	▶ 주민공동체 참여 청년 관광사업체 지원(40팀)
③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중기부	▶ 지역 자연·문화·역사 자산 활용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지원(62개사)
④청년 마을기업 운영 행안부	▶ 지역자원 활용 청년중심 마을기업 지원(11개사)
⑤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문화재청	▶ 권역별 유네스코 세계유산 활동 지원(120개팀)

4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

① 분야별 청년권익 보호

- 부당처우 해소 및 근로권익 보호 위해 청년 아르바이트 원스톱 권리구제 지원 고용부
- 청년 소비자 피해예방 활동 지원 및 청년 안전의식 개선 캠페인 지원 공정위·행안부

② 청년 주도형 국제교류 적극 추진

- 공공·국제기구·민간분야 등 청년 해외인턴 확대(5.7천명) 외교부·농식품부·국토부·재외동포청·농진청·산림청

참여 유형	주요 내용
■ 해외인턴	▶ (해외공관)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 실습원, 재외동포 청년인턴 ▶ (국제기구) 국제기구 청년진출(JPO, UNV),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차세대 아프리카 전문가 ▶ (농업분야) 농식품분야 해외인턴, 청년 해외개척단, 농업기술 연구원 ▶ (산림분야) 해외 산림 청년인턴 ▶ (건설분야) 공기업 해외 인프라 청년인턴 ▶ (민간기업) 국내청년 동포기업 인턴십
■ 국제활동	▶ WFK 및 KOICA 봉사단 ▶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 ▶ KF 글로벌 챌린저 및 한-일-한-중-한-베트남 청년교류

-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청년들을 위한 국제교류 정보 제공 외교부
 - * 해외안전 담당 영사 확대, 영사협력원 증원 등 해외안전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병행('24.3.5. 청년 민생토론회)
-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장학 지원 및 연수 프로그램 추진 교육부
 - * 한-미 대학생 연수(300명), ASEM DUO 장학(88명), CAMPUS Asia(1,400명)
- 한·미·일, EU 등 청년세대 장·단기 교류 활동 추진 교육부·산업부
 - * 풀브라이트 첨단분야 장학프로그램(한100명, 미100명), 한·미·일 청년 한국 첨단기업 탐방(한·미·일 460명), 한·미 첨단분야 청년교류 지원사업(한300명), 한·미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2,023명)
 - *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 참여 지원 등('24.3.5. 청년 민생토론회)

1. 추진과제 이행점검 및 평가

-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심층평가를 통해 개선방안 도출, 청년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24년부터는 당해연도 과제 이행성과를 연말에 종합평가*하여, 차년도 시행계획에 개선사항 즉시 반영 추진
 - * ('23) 전년도(22년) 과제성과를 23년에 평가 → ('24) 24년 과제를 24년말에 평가
 - 정책현안 과제를 별도로 심층평가하여 유사사업 연계·조정방안, 사각지대 해소방안, 새로운 정책대안 제시 등 개선방안 도출
- 청년*이 참여하여 추진과제를 수시점검하고, 점검 및 평가 결과 우수과제 담당자 정부포상 추천
 - * 청년보좌역, 2030자문단, 청년행정인턴 등

2. 정책 체감도 제고 위한 홍보·소통 활성화

- 온·오프라인을 통한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 및 시기별·타겟별 맞춤형 홍보를 통한 주요 청년정책 적극 홍보 추진
- 청년과의 소통 확대 및 참여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정책수요 발굴 및 개선, 정책 인지도와 체감도·만족도 제고 추진

3. 정책 보완 및 차년도 과제 발굴 체계화

- 청년에게 필요한 신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
- 차년도 예산편성방향을 시행계획에 명기하여 위원회 결정이 청년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화

참 고

'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주요사업 추진 일정표

	정책 과제	추진시기	부 처
1 분 기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울산·창원·의정부센터) 계획 수립	1월	병무청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디지털배움터) 운영계획 수립	1월	과기정통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상향 지급을 위한 지침 개정	1월	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지원 전담인력 확충 및 통합서비스 지원 확대	1월	복지부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민간위탁운영기관 선정	1월	고용부
	메이커 스페이스(협업형) 신규 모집공고	1월	중기부
	청년전용창업자금 융자계획 공고	1월~	중기부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시행계획 승인	1월	농식품부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출시	1월	국토부
	청년도전지원사업(구직단념청년 취업촉진 지원) 개시	2월	고용부
	농식품분야 해외 인턴십 운영기관 선정 및 인턴 선발	2월	농식품부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요건 완화	2월	기재부
	청년재도전성공패키지 재창업자 모집공고	2월	중기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2월	국토부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홍보	연중	고용부
	청년창업펀드 출자사업 공고	2월	중기부
	청년농촌보급자리 조성 신규지구 선정	2월	농식품부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추진	2~10월	권익위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 지원	3월	금융위
	천원의 아침밥 사업 시작	3월	농식품부
	청년DB 지역대학으로 찾아가는 홍보 실시	3월	국조실
	범부처 창업경진대회 운영	3~8월	중기부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 선정	~3월	중기부
	공공임대주택 연간 공급계획 수립	3월	국토부
	공공주택 나눔형·선택형·일반형 공급	연중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지원 및 사후관리	매월 25일	국토부
	청년통계등록부 운영	연중	통계청
2 분 기	해외취업지원(K-Move스쿨) 운영기관 모집공고·선정	4월	고용부
	청년 일경험 지원 민관협의회, 정책협의회 개최	4월	고용부
	신취약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	4월	복지부
	K-디지털 기초역량 훈련 신규 과정 심사	4월	고용부
	글로벌창업사관학교 국내·해외 프로그램 운영	4~12월	중기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	4~12월	농식품부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차년도 사업수요조사	4월	해수부
	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 및 이용 개시	4월	문체부
	탄소중립 청년 서포터즈 발대식	4월	환경부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한도 상향	4~6월	국방부
	웹소설 인력양성 지원 상반기 교육 진행	4~5월	문체부
	연구장비분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4~6월	과기부
	1학기 근로장학사업 운영 및 근로기관 점검	4~6월	교육부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신규 교육생 모집공고	4~7월	농식품부

	정책 과제	추진시기	부처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장학생 선정	5월	과기정통부
	청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추진	5월	보훈부
	지식재산 기반 창업지원 사업 우수창업자 후속지원	5월	특허청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신규 10개교 선정·사업 추진	5월	교육부
	대학 기숙사비 납부방식 확대 권고 및 안내	5월	교육부
	청년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5월	문체부
	2024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	5~6월	교육부
	청년참여 지자체 위원회 지정	6월	국조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 구축	6월	국토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공모·선정	6월	국토부
	군복무 중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1학기)	6~7월	국방부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건립 지원사업 공모·접수	6~7월	문체부
	대중교통비 환급지원(K-Pass) 출시	6~8월	국토부
	제2차 청년 삶 실태조사 실시	6~8월	국조실
3 분기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 예선 및 참가자 선발	7월	과기정통부
	청년특화 공공임대사업 공모	7월	국토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으로 전환	7월	복지부
	농업분야 취·창업 연계장학금 2학기 장학생 선발·지원	8월	농식품부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확정·지원	8월	복지부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 접수	8월	복지부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통합) 홍보 서포터즈 선정 등	8월	고용부
	국립공원 청년의 달 운영을 위한 예약 개시	8월	환경부
	신규 국제읍서버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8월	해수부
	지역별 거점 청년지원센터 지정	3/8월	국조실
	청년친화도시 지정 공고	8~10월	국조실
	'25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공고	8월	고용부
	2024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8~9월	교육부
	한·미 첨단분야 청년교류 프로그램 운영(1차)	8월	산업부
	자립준비청년 디지털 진로지원 프로그램 운영	8~12월	과기정통부
	해외 산림청년인재 워크숍	8월	산림청
4 분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우수사례 발굴	10월	행안부
	국제법무 전문인력 양성사업 시행	10월	법무부
	고3 대상 고교취업연계장려금 신청·지급	10~12월	교육부
	식품분야 현장실습 운영(1학기, 하계, 2학기)	연중	농식품부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제1회 ^{가칭} Co-SHOW 개최	11월	교육부
	2025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	11~12월	교육부
	군복무 중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2학기)	11~12월	국방부
	국민내일배움카드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 심사·선정	10월	고용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성과평가	12월	고용부
	온라인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시스템 개발	12월	국조실
	관광두레 전국대회 개최	11월	문체부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우수사례 선정 및 시상식	11~12월	문화재청
	국내청년 동포기업 인턴십 인턴 선발	4/11월	재외동포청